상무지구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반 우려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간담회…의견 수렴·추가 대책 등 논의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이 먼저…자치단체, 이주대책 주도에 한계"

정부가 광주 상무지구 등 2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 정비 사업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본보 2023년 2월 8일자 1면〉한 이후, 자치단체에 떠넘긴 이주대책과 과도한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자치단체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아파트 기준 50층 안팎)까지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도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재설계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자리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했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우선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세밀한 추가 대책 등을 요청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 지원 조항으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개발 혜택으로 꼽힌다.

정부는 대신 이 같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치단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개발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일단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선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주거환경 측면에서 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도 많은데, 용적률만 높였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용적률 상향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단지별 용적률 상향보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들은 또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 주도의)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재건축 정비와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이주대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한 상태다.

재건축 전문가들도 "기존 민간사업자들이 맡아온 이주 대책을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이러한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체를 꺼려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노후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주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노후 신도시 주변 원도심 균형발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실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 조건을 갖춘 사업지는 전국 49곳으로, 광주에만 상무·하남·문흥·일곡·풍암지구 등 5곳에 이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내고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환자 맞춤 케어'로 100억 절감

의료관리사, 잦은 병원이용자 1400여명 맞춤관리 성과

광주시는 "지난해 환자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해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의 의료급여를 전년보다 100억여원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 이용정보 제공, 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의료급여관리사 26명은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 환자 7201명을 유형별로 나눠 병원과 가정 등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사례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연간 급여일수가 700일을 초과하는 질병 대비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다빈도 외래이용자) 1439명을 맞춤 케어해 전년(276억3000만원)보다 진료비 100억7000만원(36.4%)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또 서구와 광산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도 의료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사례관리를 통해 퇴원이 가능한 장기입원 환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으로 재정 효율을 높이는 성과 등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해당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체계적인 맞춤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북구, 불법 광고현수막 철거 9일 오후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서 북구청 광고물관리팀이 교통섬 등에 불법으로 내걸려진 광고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토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예타 신청

상무역~나주역 28.5㎞ 1조5235억 투입…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국토교통부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 가운데 하나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 혁신도시를 거쳐 나주역까지 28.5㎞ 복선전철로 총사업비 1조52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 4월 광역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7~2020년)에 반영한 후 광주시와 공동 건의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광주시, 나주시와 함께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착공의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전달할 예정이다.

김병호 도 도로교통과장은 "광주와 인접한 나주에 광역철도망이 확충되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7550억 투입

道,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기후변화 등 능등 대처

전남도가 전국 제1의 식량 생산 기반(19%)을 바탕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핵심 12개 사업에 7550억원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 위협, 쌀 적정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농가의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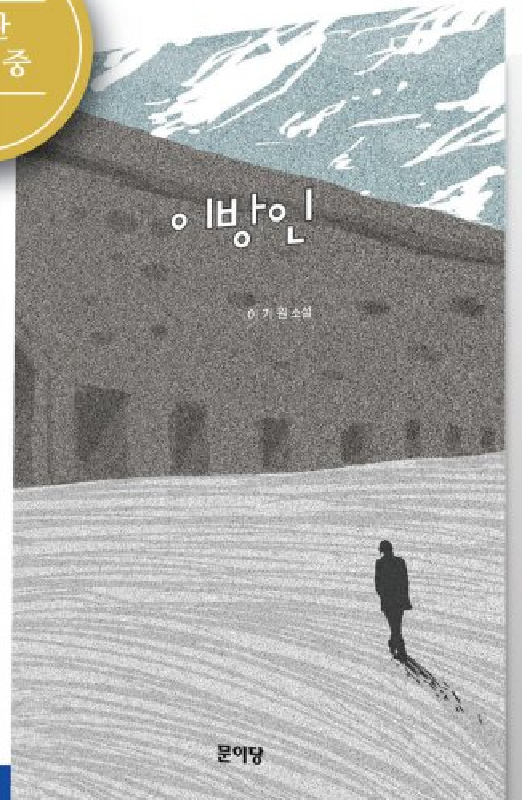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적정 생산 분야에 가루쌀과 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400억원(전국의 35%),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13개소에 27억원(전국의 44.4%),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1875ha에 37억원 등 3개 사업에 464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분야에 규모화된 들녘 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104개소에 129억원, 공동 육묘장 설치,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 157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기계화가 열악한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5884대 150억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4000대 21억원, 영농안전장비 14억원 등 3개 사업에 18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돼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전남 농업인 5만4000명에게 337억여 원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절찬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